

(별첨)

---

# 2025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

---

2025. 2.



금융감독원

<b>I. 2025년 금융감독 방향</b> .....	<b>1</b>
1. 금융감독 환경 .....	1
2. 금융감독 방향 .....	3
<b>II.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</b> .....	<b>4</b>
<b>전략① [안정]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</b> .....	<b>5</b>
1.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선제 대응하겠습니다. ....	5
2. 금융권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. ....	6
3. 시장 안정을 지킬 수 있는 선진화된 감독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. ....	7
<b>전략② [신뢰]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</b> .....	<b>8</b>
4.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. ....	8
5.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·불건전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 ....	9
6. 금융권의 영업관행·내부통제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. ....	10
<b>전략③ [상생] 국민과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</b> .....	<b>11</b>
7. 국내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의 동반 성장·발전을 이끌겠습니다. ....	11
8.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 ....	12
9. 국민의 재산을 노리는 민생 금융범죄를 척결하겠습니다. ....	13
<b>전략④ [미래]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</b> .....	<b>14</b>
10. AI 등을 활용한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. ....	14
11.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. ....	15
12.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. ....	16
<b>전략⑤ [쇄신]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</b> .....	<b>17</b>
13. 업무 관행을 쇄신하고 금융회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. ....	17
14. 디지털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. ....	18

# I. 2025년 금융감독 방향

## 1 금융감독 환경

### 가 금융시장 변동성 및 가계부채 리스크 등 확대 우려

- '25년 성장률 둔화, 통화정책 기조 변경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, 가계부채 및 건전성 관리위험 등 확대 우려
  - **(금융시장 변동성 확대)** 1%대 성장\*이 예상(정부 1.8%<sup>e</sup><25.1월>, 韓銀 1.6~1.7%<sup>e</sup><25.1월>)되는 가운데, 美 정책변화 과정\*\* 등에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
    - \* 내수회복 미약(소비·설비투자 완만한 개선, but 건설투자 부진 지속) 및 수출증가세 둔화 등
    - \*\* 美 신정부의 통상·산업·이민정책 등 변화, 이에 따른 美 연준의 금리인하 경로 변화 등
  - **(가계부채 리스크)** 통화정책 기조 변경,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전환 등으로 가계대출 관리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 증가 우려\*
    - \* 가계부채/GDP 비율(%): ('22)97.3 → ('23)93.6 → ('24.2Q)91.1 → ('24.3Q)90.8(최근 3년간 하향 안정)
  - **(자산건전성 악화)** 고금리·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\* 등 잠재리스크 확대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이 더욱 중요
    - \* 취약차주(개인사업자·기업 등) 부실채권 증가, 부동산 PF·대체투자 손실 확대 등

☞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리스크요인에 선제 대응하고, 금융권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

- 리스크 현실화에도 금융권이 자금공급 축소 없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건전성 강화를 지속 추진

### 나 불완전판매·금융사고 지속 등으로 인한 금융산업 신뢰도 저하

- 단기실적에 치중하는 경영문화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불완전판매(DLF, 사모펀드, H-ELS 등)가 반복되는 등 금융권 신뢰도 저하 지속
  - 이로 인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의 반복, 검사·제재·분쟁조정 과정에서 감독자원의 집중 투입 등 비효율도 초래
  - 대형 여신사고 등 금융사고 빈발,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에 따른 위법·부당행위도 금융권 신뢰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

☞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회사 경영문화시스템 확립 유도, 내부통제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안착 등을 통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필요

## 다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약화 지속

-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이자 주요 경제대국(경제규모 10위권)으로 자립매김하였으나, 자본시장의 발전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
  - 특히 주주이익 중심의 경영문화 미흡 등으로 증시 저평가 상태\*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저하
- \* '23말 기준 한국 증시의 PBR은 1.05로 신흥국 평균(1.61)대비 크게 낮은 수준
- 생산적 금융지원 및 국민자산 증식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이 원활치 못함에 따라 가계자산의 부동산 집중\* 등이 심화
- \* (가계 자산구성, '23년) 한국: 금융자산 34.8%, 부동산 63.7%(출처: 한국은행)  
미국: 금융자산 68.2%, 부동산 27.1%(출처: FRB)

☞ 선진화된 자본시장 구축을 통한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 및 국민자산 형성 도모라는 '자본시장-국민경제간 선순환 구조'를 복원할 필요

## 라 취약계층 자금공급 축소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증가 우려

-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·자영업자 등 영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으며,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 강화 과정에서 자금공급 축소 우려
- 한편,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불법사금융 등 민생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피해 확대 우려

☞ 소상공인·자영업자 등 유동성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자금공급 원활화 유도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 금융범죄 예방 등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

## 마 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 발생

- 급속한 ICT 발전으로 AI·빅데이터 등 기술이 전 산업에 도입되는 추세임에 따라 금융산업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
- 금융산업에서 新기술의 도입·활용은 소비자효용을 증대시키는 동시에, AI 활용의 안전성, 사이버 공격에 따른 피해 등 부작용도 수반

☞ 디지털 혁신이 책임성, 소비자보호 등과의 조화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지원 방안 및 규율체계 확립(내부통제 등)을 균형감 있게 추진할 필요

## 2 금융감독 방향

- (전략목표) 금감원 비전,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할 5대 전략목표를 설정
- ①(안정)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, ②(신뢰)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, ③(상생)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, ④(미래)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, ⑤(쇄신)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쇄신 지속
- ⇒ 5대 전략목표(안정, 신뢰, 상생, 미래, 쇄신) 하 14대 핵심과제 마련

2025년 업무계획	
<b>【5대 전략목표, 14대 핵심과제】</b>	
<b>안정</b>	(전략목표①)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
	1.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선제 대응하겠습니다.
	2. 금융권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.
<b>신뢰</b>	(전략목표②)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
	4.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.
	5.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·불건전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
<b>상생</b>	(전략목표③)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
	7. 국내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의 동반 성장·발전을 이끌겠습니다.
	8.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<b>미래</b>	(전략목표④)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
	10. AI 등을 활용한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.
	11.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.
<b>쇄신</b>	(전략목표⑤)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
	13. 업무 관행을 쇄신하고 금융회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.
	14. 디지털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.

## Ⅱ.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

◻ '5大 전략 목표'에 따라 2025년에 수행할 '14대 핵심과제'를 마련

### 2025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

#### 5대 전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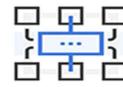
안정



신뢰



상생



미래



혁신

#### 전략목표

#### 14대 핵심과제

균건한  
금융시스템  
확립

-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선제 대응하겠습니다.
- 금융권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.
- 시장 안정을 지킬 수 있는 선진화된 감독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.

공정한  
금융패러다임  
구축

-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.
-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·불건전행위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
- 금융권의 영업관행·내부통제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.

국민과  
동반 성장하는  
선순환  
구조 마련

- 국내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의 동반 성장·발전을 이끌겠습니다.
-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- 국민의 재산을 노리는 민생 금융범죄를 척결하겠습니다.

책임 있는  
혁신기반  
조성

- AI 등을 활용한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.
-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.
-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.

일류 감독  
서비스를 위한  
내적 쇄신

- 업무 관행을 쇄신하고 금융회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.
- 디지털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.

## 전략① [안정]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

### 1.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선제 대응하겠습니다.

#### □ 부동산금융에 대한 종합적 관리·감독체계 마련

- 상호연계성이 높은 PF,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·기업대출·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종합 점검하여 취약 영역 관리강화, 규제 정비 등 추진

##### < 부동산금융 종합적 관리·감독방안 예시 >

- ① 세부 자산유형·업권별 부동산금융 건전성 상황을 정밀 점검
- ② 실물(부동산) 충격 발생시 부동산금융 내 자금 이동, 부실 전이경로 등을 종합분석\*  
\* 예) 부동산시장 충격 가정시, 순 금융권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시나리오 분석 등
- ③ 취약 영역에 대한 관리 강화, 부실자산 감축, 건전성규제 정비\* 등 실시  
\* 예) 손실위험에 상응한 건전성규제 합리화, 리스크관리 수준이 낮은 업권에 대한 규제 강화 검토 등

- PF사업장의 분기별 상시평가 체계\*가 안착되도록 하고, 차질없는 정리·재구조화 이행을 지도\*\*하여 건전성 관리 및 PF시장 자금 선순환 유도

\* 매분기말+ 1개월 내 사업성평가, 2개월 내 부실사업장 정리·재구조화계획 확정 및 이행실적 보고

\*\* 매주 실적점검, 정리지연 사업장 입찰가 하향 엄격 적용, 유찰시 보수적 총당금 적립 등

#### □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선제적 대응

- 거시경제 불안요인\*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 분석하여 잠재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고, 유관기관과 공조하에 시장불안에 선제 대응

\* 예) ①고관세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정책 불확실성, ②고환율 등이 미치는 영향, ③내수부진에 따른 성장률 하락, ④부동산PF 부실 정리, ⑤수출 모멘텀 둔화 가능성 등

- 한은과 공동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강화

#### □ 금융시장 상황 급변 및 부실발생에 대비한 모니터링 강화

- 외화유동성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 신설\*,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대상기관 확대\*\* 등 외환리스크 관리 강화

\* ①본점 기준 외화LCR, ②만기비율 지표 등 추가

\*\* 증권 및 보험사 각각 10개사 → 18개사로 확대

-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을 일단위 등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고, 건전성 악화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도모

-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(5천만원→1억원)에 따른 영향분석을 실시하고, 대출쏠림 완화 등 자금 조달·운용상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마련

## 2. 금융권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.

### □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·체계적 대응

- ①정교한 관리체계 마련, ②상환능력 중심의 심사관행 확립, ③질적 구조 개선 등을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 추진

- ① 은행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 점검(분기별) 및 정교한 관리체계 마련\* 지도  
\* 계절성, 대출예상 수요 등 고려한 연간 목표의 합리적 배분, 한도소진율에 따른 단계별 조치계획 수립 등  
- 대내외 경제 여건, 주택경기 등을 반영한 가계대출 동향 모니터링 고도화 추진
- ②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준비(영향분석 및 창구 모니터링 등), 소득자료 정확성 제고 등을 통해 관리목적 DSR 내실화(산출결과는 리스크관리체계 수립에 활용)
- ③ 분할상환·고정금리 중심의 질적 구조개선 지속 추진, 은행의 장기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추진 등

※ 가계부채의 명목 GDP 성장률 이하 관리 기조는 확고히 유지하되, 거시경제 여건 및 취약부문 자금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세조정 병행

### □ 기업부채 잠재리스크 조기 선별을 위한 관리 정교화

- 위험도가 높은 건설사의 주별 세부동향 파악(Watch-list 관리), 업종별 전문가와의 소통 등을 통해 취약업종 기업에 대한 분석·점검을 강화
- 업황 저조, 재무구조 취약 등 잠재 부실위험이 높은 대기업 그룹 등에 대해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채권은행의 엄격한 관리 유도\*  
\* 예) 주채무계열 약정이행 점검 현황 확인 후 미흡사항 발견시 적극적인 개선 유도, 은행 조기경보시스템 및 잠재 부실기업 선정 동향 등을 수시 신용위험평가와 연계 등
-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금융산업·시장 및 부동산PF 영향을 점검·대응하는 등 질서있는 구조개편 추진\*  
\* 예) 금융권 건전성리스크 및 채권·CP 등 시장 영향 정밀진단(필요시 핀셋대응) 등

### □ 원활한 기업구조개편을 위한 체계 마련

- 주채무계열 제도, 신용위험평가 제도 등 現 기업구조개편 관련 제도 현황을 분석·점검하고,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
- 경제 여건·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기업 신용위험평가 및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제도의 정교화\* 등 추진  
\* 예) 부실 가능성이 높은 유의기업 판단기준 마련, 평가지표에 유동성 대응능력 반영 등

### 3. 시장 안정을 지킬 수 있는 선진화된 감독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.

#### □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금융안정 확보를 위한 건전성 감독 강화

- **(은행)** 은행그룹의 통합적 자본·유동성 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유동성·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추진
- **(중소)** 중소기업회사 자본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해 리스크 산정방식 정교화 등 위험기반 자본규제 개선 등을 검토
- **(보험)** 보험부채 평가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가정에 대해 '감리 프로세스'를 구축하고, 실적경쟁 촉발회사 대상 특별감리 실시\*  
\* 전문인력 중심으로 '특별감리전담반'을 편성하여 우려회사에 대한 집중감리를 실시
- **(금투)** 증권사의 안정적 성장 지원 등을 위해 자본적정성 지표의 실효성·유의성을 제고하는 등 순자본비율 산정방식 개선 추진
- **(전자금융)** PG사 등 전금업자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해 경영지도기준 준수현황을 반기별 대외공시하고, 미준수사에 대한 현장점검 등 확대

#### □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 금융감독 규제체계 선진화 추진

- **(은행)** 완화적 통화정책 전환 등에 대응하여 '은행계정 금리리스크'(IRRBB)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관리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추진\*  
\* 최근 금리동향을 IRRBB 표준방법론에 반영하는 BCBS 금리충격 변경안 도입 등
- **(중소)** 저축은행간 자산규모 격차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자산규모·리스크 등을 감안한 규제체계 다양화 방안을 검토
- **(보험)** IFRS17 下 상품개발·결산·내부통제 등과 연계된 계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감독을 위해 「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」 마련\*  
\* 예) 해외·타권역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부채평가 관련 검증 매뉴얼 및 제재기준 정비 등
- **(금투)** 시장충격에 따른 펀드런을 사전방지하기 위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(LMT, Liquidity Management Tools) 도입방안을 검토

4.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.

□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관행 개선

- 「공정금융 추진위원회」 운영방식 개선\*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채널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관행 발굴 및 개선 노력을 지속

\* 소비자-금융회사 간 소통의 場 마련, 현장간담회 확대, 해외사례 분석, 위원회내 외부위원 비중 확대 등

< '25년 금융거래 관행 점검항목 예시 >

- (은행)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체계 점검,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현황 점검 및 미흡사항 개선 지도
- (중소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상 주요 법규 준수사항에 대한 시행 현황 점검
- (보험) 협상력이 낮은 영세기업 대상 기업성보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보험계약내용 안내 강화
- (금투) 개인 대상 고위험 회사채 판매절차(투자위험 설명 등) 적정성 점검

□ 금융업계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문화 정착 유도

-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부서가 소비자보호 기능을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부서의 기능과 역할 강화\*를 유도

\* 예) 민원·분쟁처리 관련 소비자보호부서가 실질적 기능을 수행, 보험사의 보상기준 제·개정시 소비자보호부서의 사전검토 절차 구축 등

-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·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 점검\*

\*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점검결과 확인된 우수·미흡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강화를 유도·지원

- 민원처리 관련 인프라 및 업무체계 등이 미흡한 회사를 선정하여 취약요인 개선을 위한 현장컨설팅 실시

□ 금융민원·분쟁처리 프로세스 고도화 등 혁신 지속

- '24년 생명·일반손보 등에 도입한 '분쟁 유형별 집중처리시스템\*'을 고도화하고, 실손을 포함한 질병·상해까지 확대

\* 다양한 분쟁을 접수단계부터 사고·쟁점 등으로 유형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체계

-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개선방안(의료개혁특위 논의) 등을 반영하여 주요 실손 비급여 분쟁유형별로 상세한 분쟁처리기준을 마련·운영

## 5.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·불건전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

### □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·검사 강화

- 금소처<sup>內</sup> 민원·분쟁 관련 조사를 전담하는 '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'을 신설하여, 소비자 피해가능성 인지시 신속한 현장 점검·조사를 실시\*
  - \* 소비자와 일선에서 접하는 금소처가 신속히 현장 점검조사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추가 검사 제도개선과 연계함으로써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조기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리스크관리·내부통제 소홀, 무리한 외형성장 추진 등 운영위험이 높은 금융회사\*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
  - \* 예) <보험권> ①합리적 회계모형 미사용으로 CSM 확대, ②소비자 피해 유발 판매채널 의존, ③과도한 외형성장 목표 설정, ④자회사 GA의 모회사 위주 판매 관련 비교설명 위반 등
- 시정조치 수단\*을 적극 활용하여 재발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 법규위반 사례 등의 대외제공 확대 등을 통해 사전예방을 도모
  - \* 예) 중대법규 위반으로 위법행위 시정 또는 피해배상 등이 즉시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발동

### □ 금융소비자·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엄단

- 소비자 피해 유발,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 신속·엄정하게 검사를 실시하여 시장규율 확립
- 채권 브로커(증권사), 운용역 등 시장 종사자들의 채권파킹 등 불법 자전거래, 채권가격 교란 등 각종 위법행위 반복사례를 중점 점검
- 보험회사 영업행위 전반에 대한 효과적 점검을 위해 연계검사 및 동시검사\*를 확대 실시하여 불건전 보험영업 행위를 엄단
  - \* [연계검사] 보험회사-자회사형 GA / [동시검사] 보험회사-관련 대형 GA

### □ 자본시장을 위협하는 불공정거래·회계분식의 근절

- 부당 사익편취 혐의가 포착\*된 불공정거래 상습전력자·전문가집단\*\*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혐의 발견시 신속 조사 및 엄정 조치
  - \* 사모CB 악용, 신규사업 가장, 좀비기업, 공개매수 직전 급등종목 등 관련
  - \*\* 상장사의 대형 이벤트(공개매수, 기업인수 등)에 관여한 주관사, 법무·회계법인 등
-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(NSDS) 구축·안정화 및 시스템 가동 이후 적출된 위반혐의 건에 대해 신속·집중적 조사 실시
- 주요 회계이슈\*에 대한 테마심사 집중처리 및 분식회계 유인이 높은 IPO기업·퇴출 위험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·감리 강화
  - \* ①수익 인식, ②비시장성 자산 평가, ③특수관계자 거래, ④가상자산 회계처리

## 6. 금융권의 영업관행·내부통제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.

### □ 금융회사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- 고위험 금융상품의 경우 '적합한' 소비자에게 '충분히 알리고 계약'하는 금융상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관행 개선을 추진\*
  - \* 소비자 행동경제학적(Behavioral Economics) 관점에서 바람직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모색을 위해 행동경제학자, 금융업계가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실시
- 보험회사의 '판매위탁 GA 선정 및 평가표준'을 마련하여 판매위탁 리스크 통제를 강화하고, 보험회사 운영위험 평가체계\*를 도입
  - \* 평가등급에 따라 K-ICS(지급여력비율) 자본비용 부과(운영위험액 차등) 등을 검토
- GA의 준법감시인력 확대, 임원 자격요건 강화, 규모별 영업보증금 차등화 등 GA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·시행

### □ 금융회사의 영업관행 개선 유도 등을 위한 점검·조치 실시

- 감독당국 지도사항(가계대출·PF 관리 등)과 연계한 검사실시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체 리스크관리를 독려하고, 검사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활용
- 소비자 중심의 보험상품 개발·판매가 이루어지도록 과당경쟁·소비자피해 우려 상품에 대해 '통합적 조치'(①상품감리 → ②시정조치 → ③제도개선) 실시\*
  - \* 문제상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상품위원회 및 경영진의 '내부통제 작동여부' 점검, 판매과정 검사 등을 동시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

### □ 내부통제 강화 및 건전한 경영문화 정착 유도

-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도입·정착을 위해 ①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, ②시범운영·컨설팅, ③도입후 운영실태 점검 등 체계적 관리를 실시\*
  - \* (은행·지주) 운영실태 점검, 미비점 개선 지도 (기타) 도입일정에 맞춰 준비 지원 및 시범운영
- 지배구조법이 미적용되는 상호금융 대형조합에 대해 지배구조법 적용에 준하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진
-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·금융사고 유발요인 개선 및 성과와 책임에 부합하는 보수체계 마련을 유도
- 온정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징계기준 강화, 감경·면책기준 구체화 등과 함께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준법제보(내부고발) 활성화\*를 추진
  - \* 예) 위법·부당행위에 대해 누구나 문제제기(speak up)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 등
- 보험회사의 바람직한 리스크·내부통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'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' 신설 및 '보험권 지배구조 모범관행' 마련 등 추진

**7. 국내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의 동반 성장·발전을 이끌겠습니다.**

**□ 금융투자산업 구조 개편 및 합리화 추진**

- 종투사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, 발행어음, IMA(종합투자계좌) 등 종합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
- 자생력 있는 운용사 위주의 사모펀드 시장 재편을 위해 부적격 사모운용사 잔존수탁고 처리 세부방안 마련을 지속

**□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노력**

- 대체거래소 출범('25.3월)에 대비하여 증권사 최선주문집행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 대체거래소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 지원\*  
\* '24.6월 발표한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사의 시스템 구축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·투자자 홍보강화를 통해 복수시장 도입에 따른 투자자 편익 제고
- 한계기업을 적기에 퇴출할 수 있도록 상장유지요건 강화,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등 관련 제도 개선 및 원활한 정착 추진
- 의결권 행사 비교·공시시스템 마련 등 운용사의 충실한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단계적 점검·공시 방안 추진
- 주주권 행사가 보장되도록 ①주총 안전내용의 충실한 기재, ②일반주주의결권행사의 편의성 확대, ③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강화 등\* 추진  
\* 예) ①참고서류 설명 강화, ②전자적 의결권행사 활성화, ③주총 결과보고 공시 상세화 등

**□ 국민재산 증진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지원 등**

- 공모펀드 출시와 관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, 비조치의견서 발급 검토 등을 통해 창의적 신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
- 신탁이 국민의 재산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종합재산신탁\* 등 신탁상품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규제개선 지원  
\* 단일계약으로 복수 재산신탁이 가능한 상품이나, 현재 총 수탁고의 0.1% 미만

**□ 자본시장 위험요인 대응 강화 및 리스크관리 체계 정비**

- 시장변동성 등에 대비한 금융회사 위기대응여력을 면밀히 점검\*하고,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제체계 정비  
\* 일부 취약회사의 위험이 업권 전반에 전이되지 않도록 건전성·유동성 등을 철저히 관리

**□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**

- 디폴트옵션 제도개선, 투자일임제도 활성화 등 자본시장과 연계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방안 검토

## 8.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### □ 서민·자영업자·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 강화

-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등을 위해 저축은행·상호금융업권 등이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시 감독상 인센티브 확대\* 추진  
\* 예) 저축은행·상호금융업권 예대율 산정시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 일부 차감 등
- 중기·소상공인의 유동성 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「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(24.12.23. 발표)」 등의 원활한 이행 지원\*  
\* 예) 적극적 채무조정 실적(장기분할상환·이자감면)의 경영실태평가 반영, 임직원 면책 등
- 개인사업자 자금지원 등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채투자 평가제도 개선\* 검토  
\* 예) 중소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실적 별도 평가, 지역별 예대율 평가시 기업대출의 가중치 상향
- 인터넷전문은행에 의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지속 공급을 유도하고, 목표비중 달성 여부, 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등을 점검

### □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내실화

- 비금융정보 등을 이용한 대안신용평가 활용실태 파악 등을 통해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지원
- 노후·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가입·보장연령 확대\*를 추진하고, 노령층·고금리계약자의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신설방안을 마련  
\* 예) 가입연령(기존 70, 75세→90세) 및 보장연령(기존 100세→110세) 등 검토
- 새희망홀씨의 비대면 판매채널 확대,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 시스템 활성화,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보증부대출 홍보 강화 등을 추진

### □ 취약소비자 금융접근성 제고 등 차별없는 금융서비스 이용환경 조성

- 시중은행의 연간 이동점포 활용계획\* 수립 및 이행현황 점검(분기) 등을 통해 고령자의 오프라인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 강구  
\* 이동점포 차량내에 금융단말기, ATM 등을 설치하여 창구업무를 취급
- 금융회사의 장애인 응대매뉴얼 정비, 장애유형별 지원 인프라 확충 등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추진
- 삼둥이 등 다태아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이 거절(또는 제한)되지 않도록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개선

## 9. 국민의 재산을 노리는 민생 금융범죄를 척결하겠습니다.

### □ 민생 금융범죄의 원천적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 강화

-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①비대면 계좌개설 등 사전 차단, ②통신사-금융사간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정보 공유체계 마련 등 추진
  - \* ①(비대면 계좌)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비대면 계좌개설, 오픈뱅킹 사전 차단제도 도입
  - (②이체차단) 통신사의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정보를 활용하여 금융회사가 자금이체 차단
-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는 온라인 불법금융광고, 스팸문자 등을 '송출 前 단계'에서 차단 강화\*
  - \* ①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사의 사전심사 의무를 강화하는 법제화 지원(정보통신망법, 방송통신위원회), ②불법 스팸문자 차단 대상 확대(불법금융투자→불법대부) 등을 추진
-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범죄수단을 억제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초과, 불법추심 등 불법대부 전반\*에 이용된 전화번호(대포폰)를 적극 차단
  - \* 대부업법상 전화번호 차단 : (기존) 불법대부광고 → (개정) 불법대부행위
- 민생 금융범죄에 신속·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생 금융범죄 연루 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\*
  - \* 민생범죄 관련 금융거래 포착을 위한 민생범죄 테마별 공동대응 추진단(FIU 주관) 참여 등

### □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대응 및 사후 피해구제 노력

- 금감원內 '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'를 중심으로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공동·총력대응 지속

#### < 관계기관 공동대응 예시 >

- (피해 지원) 우리원 피해신고 접수 건 등의 경찰청 등 공유 및 유관기관 지원서비스 종합안내
- (홍보) 금융위·법률구조공단 등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요건·효력, 무료소송 지원제도 등 집중 홍보, 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, 유관기관과 맞춤형 공동 홍보(피해예방, 대응요령 등)
- (예방) 과기정통부, 개인정보위 등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통화 탐지 앱 조기 활성화 추진
- (조사) 경찰청, 건보공단 등과 보험사기 수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맞춤형 수사 지원

- 병·의원, 보험설계사가 연계된 보험사기의 기획조사\*를 실시하고, 연루 설계사는 확정판결 즉시 퇴출되도록 「보험업법」 개정 지원
  - \* 예) 실손보험금 편취를 위한 보험설계사의 진단서 위·변조 보험사기 조사
-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 개정제도 시행\* 안착, 책임분담기준 비은행권 확대에 따른 관련 프로세스 개선\*\* 등 원활한 피해구제 지원
  - \* 예)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마련, 선불업자와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등
  - \*\* 예) 피해환급금 정보 조회·제공 절차 전산화 등

10. AI 등을 활용한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.

□ 금융권 AI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

- AI 개발목적의 양질의 학습데이터 공급 확대를 위해 가명정보 및 합성데이터\* 등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 등을 지원

\* 예)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새롭게 생성한 데이터로 실제 데이터와 통계적 속성이 동일·유사한 가상의 데이터(→ 실명정보의 개인식별 리스크 감소)

- 데이터전문기관별 데이터 결합 소요기간 점점 등을 통해 신속한 데이터 결합 및 반출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

- 금융데이터 부족, 비용 등 문제로 AI 개발·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금융회사를 위한 「금융권 공동 AI 플랫폼」 구축을 지원\*

\* 예) 신용정보원·금융보안원·금융결제원이 공동추진중인 AI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보안·취약점 관리 등을 지원

□ 안정성·책임성 제고를 위한 AI 규율체계 마련

- 금융회사에서 AI 개발·활용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「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(가칭)」 마련 및 안착 등을 지원

- 금융회사가 AI 서비스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개발·활용하고 AI의 위험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 마련 등

□ 가상자산 규율체계 안착 및 고도화 추진

-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상자산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국회·정부의 2단계 법안 제정 등을 지원

- 기술·산업 측면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해외 규제체계 등을 연구하여 국내 규제체계 마련시 반영

- 디지털 혁신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의 추가 자율규제\* 마련을 유도

\* 예) 광고·마케팅 등 영업행위준칙, 사업자 자율공시 등

## 11.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.

### □ 금융권 IT 운영 거버넌스 확립·강화

-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「IT감사 가이드라인」을 마련하고 원칙중심 규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감독규정 해설서 발간
-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금액 상향, 전자금융업자의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등 강화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안착 지원
- 금융회사 스스로 IT운영·통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, 우리원 평가 후 고위험社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'IT자율시정제도\*' 확립

\* '24년 저축은행에 도입·적용하였고 '25년 중소형 증권·보험사에 확대 적용 예정

### □ 금융회사의 사이버 복원력 강화

- 은행권 재해복구(DR)센터의 실효성 개선을 위해 <sup>[1단계]</sup>핵심업무·비상계획 조정 및 <sup>[2단계]</sup>전산센터 구조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\*
- 금융지주 전체 계열사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하여 IT회복 탄력성 및 전환서비스 실효성 검증
- 블라인드 방식의 모의해킹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\*하고, 시나리오 기반의 사이버 위협 예방 실태점검 및 대응체계 검토

\* 전체 금융회사 대상으로 확대하고, 특정회사에 대해 훈련기간 예고 없이 모의해킹 실시

### □ 실효성 있는 제3자 IT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

- SaaS 및 생성형 AI 활용 확대 등에 대응하여 제3자 위탁업무의 중요도에 비례한 차등화된 보안통제 및 보고체계 마련\*

\*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 관련 제도개선 검토

- 주요 금융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및 모범사례 전파 등을 통해 자율개선 유도

## 12.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.

### □ 금융산업 혁신 등을 위한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

- **(은행)** 은행이 보유한 우수한 인프라와 자원이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비금융서비스 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
- **(중소)** 비대면·모바일·데이터 기반 지급결제 확대 등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신용카드업 상생·발전을 위한 제도개선\*을 지원
  - \*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, 새로운 결제수요 대응, 결제안정성 강화 등을 T/F(금융위 등)를 통해 검토 예정
- **(보험)** 고령화에 대응한 사후(死後) 자산의 유동화(노후소득 전환) 제도\* 도입, 생활밀착형 상품 특화보험사 설립 관련 감독 컨설팅 제공 등 추진
  - \* [사망보험금 자산유동화]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(연금 등)으로 지급받는 제도
- **(금투)** 주요국 사례, 국내 시장수요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신규 ETF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마련

### □ 금융산업 본연의 역할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

- 은행권의 특정 자산 쏠림에 대한 자본부담을 높여 부동산 여신 취급유인을 억제하고, 혁신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유도
- 저축은행·상호금융이 지역 서민금융 공급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\* 마련을 추진
  - \* (저축) 지역서민금융 공급 확대,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확충, 건전성 관리지원 등 (상호) 여신 포트폴리오 재편, 리스크관리 고도화, 내부통제 강화, 관계형 금융 활성화 등
- 전자금융업의 이용자 신뢰회복 등을 위해 PG사의 판매자 정산자금 별도관리 관련 제도 도입 준비, 선불충전금 보호실태 점검 등 추진
- 금융권 녹색여신을 활성화하고 금융회사에서 취급이 용이한 전환금융(Transition Finance) 도입을 검토하는 등 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추진
- 전 국민이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·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\*를 위해 상품구조 개편, 보상기준 개선 등을 지속 추진
  - \* 보험금 누수 등 지속시 보험료 급증 등으로 인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

□ **(실손보험)**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본연의 기능(보편의료 강화, 중증질환자 집중지원)을 수행토록 구조 개편

-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의 관리체계 강화 등(☞ 향후 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)

□ **(자동차보험)** 대인보험금의 ①향후 치료비, ②경상환자 장기치료비 등 보상기준 개선

13. 업무 관행을 쇄신하고 금융회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.

□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사·제재 프로세스 마련

- 권역별·부서별·개인별 검사 총량 및 검사처리 진행상황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검사의 신속·효율성 강화
- 기관·개인간 제재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제재양정기준 정비를 추진하여 제재 수위의 합리성을 강화
- 광고기준 위반 등 빈번히 발생하는 금소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\*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
  - \* 예) 단순 절차적 위반과 허위·과장 광고 등 실체적 위반에 대한 양정기준 차등화

□ 금융회사의 업무역량 및 편의성 제고 지원

- 약관심사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쏠 보험사가 타사의 보험상품 신고 결과(신고수리·변경권고 사유 등)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
- 분쟁처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서민금융업권 대상 분쟁유형별 표준회신문 마련 및 찾아가는 분쟁조정 간담회 실시 등 분쟁처리 역량 강화 지원

□ 금융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 유연한 감독정책 운영

- 금융안정 및 실물경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글로벌 기준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 건전성·유동성 여력 강화 조치를 마련하는 등 유연한 감독정책을 운영

- 금융권 건전성·유동성 여력 강화: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 연기, 비거래적 외환포지션 시장리스크의 위험가중자산 산출 제외, 증안펀드 K-ICS 위험액 경감 등
- 국내기업 대출·투자 부담완화: 벤처투자 펀드의 위험가중치 완화, 해외 신용평가기관 평가 등급의 위험가중치 활용, 비금융 지주회사의 실질에 맞는 업종 분류(위험가중자산 산정사)

## 14. 디지털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.

### □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 등 업무 혁신

- 디지털 기술 기반의 업무수행 등을 통해 금융감독업무가 고도화·전산화·체계화될 수 있도록 디지털전환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이행
  - 데이터 중심 감독체계 구축, 업무프로세스 디지털화, 감독정보 접근성 확대 등 추진\*(감독서비스 질적 제고 및 금융회사 자료제출 부담 감소 등 기대)
- \* '25년중 은행 여신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자동수집 인프라 구축, Paperless 인허가 등록 시스템 구축, 제재공시 데이터 공유체계 개선 등 추진
- '차세대 회계감리시스템' 구축을 통해 ①심사·감리 쉐 과정의 시스템화, ②기업정보 접근성 제고, ③회계검토모형 고도화 등 추진\*
  - \* ①심사·감리 세부 업무단계별 진행상황 및 처리기한 등에 대한 관리
  - ②공시된 재무정보와 비정형 뉴스 등 원내외 분산된 기업정보를 적시에 활용
  - ③최근 회계분식 유형 등을 분석하여 분식위험률 산출 모형에 기초변수로 반영하고, 폐업회사/특이 거래처 등 의심거래 선별기능 구현
- '가상자산 조사시스템' 2단계 구축을 통해 가상자산 가격·거래량 등 정보를 금감원 DB에 축적하고 일별 특이종목 모니터링 기능 등 강화

### □ 금융감독 역량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

- 검사·감리 등 일선부서에 IT인력을 증원하여 현장 대용량 데이터 등에 대한 전문성 높은 분석을 실시하는 등 검사·감리 수준을 한층 제고
- 금감원내 금융감독 연구전담 조직을 통해 주요 현안·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연구·조사(정책·모형개발 등) 기능 강화
- 대체거래소(ATS) 출범에 맞춰 복수시장 연계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, 상습전력자 DB 체계화 및 연계성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사시스템 개선
- 해외 사무소 조직의 현지 조사(해외 주요국 시장 동향, 감독정책·제도 변화), 국제기구 대응 및 감독당국 네트워크 기능 강화 추진